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539 |
|----------|-----|

발의연월일 : 2009. 8. 28.

발 의 자 : 박수범·조신행 의원외 6인

## 1. 제안이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합 의 : 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 복지정책과와 합의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참전명예수당)** ①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4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의  
따로 정한다.

**제5조(보조금)**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관 련 법 령

##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4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등록 및 결정)**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2.1.26>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6, 2007.1.3>

④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1.3>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② 삭제 <2005.3.31>

③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5.3.31>

④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⑥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제27조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6·25참전유공자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에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찬 성 의 원 서 명

[illegible]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09. 9. 8  
교육사회위원회

### I.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 8. 28 박수범·조신행의원외 6  
나. 회 부 일 자 : 2009. 8. 31  
다. 상 정 일 자 : 제184회 제1차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질의, 심사, 수정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수범 의원)

#### 1.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참전유공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참전명예수당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권태환)

○ 본 조례안은 그동안 6·25 및 월남참전자들이 국가의 위기사태 해결과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위하여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열악한 처우를 받아오고 있는 현실임으로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 승계,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사업 등을 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별 문제가 없음.

○ 다만, 우리시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 제정된 사항을 보면 동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과 본인 사망시 사망 조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구는 1년이상 구에 주소를 둔자 중에서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향후, 자치구에서 조례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중복지급 또는 배제 등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IV.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539 |
|----------|-----|

제안연월일 : 2009. 9.

8.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 1. 수정이유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나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월 5만원으로□를□월 5만원 이내로□수정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2항(참전명예수당) 중 “월 5만원으로” 를 “월 5만원 이내”**  
로 함.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정안  | 수정안  |
|--|--|
| <p><b>제4조2항</b><br/>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u>월 5만원으로</u><br/>한다.</p> | <p><b>제4조2항</b><br/>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u>월 5만원 이내로</u><br/>한다.</p> |